

소득 늘었지만 소비는 ‘뒷걸음’ 세금·이자늘며 처분소득 체감 ↓

데이터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
월평균 소득 542만원, 전년비 4.0% ↑
물가부담 등 연간 소비지출 0.4% ↓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이 늘어났으나, 연간 기준으로 실질 소비지출은 외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이자부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0% 증가했다.

근로소득 336만9000원으로 3.9%, 사업소득 112만4000원으로 3.0%, 이전소득은 76만6000원으로 7.9% 각각 늘어 소득 상승을 이끌었다.

가계지출은 408만1000원으로 4.4% 증가했다. 이 중 소비지출은 300만8000원으로 3.6%, 비소비지출은 107만3000원으로 6.5% 각각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434만9000원으로 3.4% 증가했고 흑자액은 134만원으로 2.7%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부문별 편차는 컸다. 교통·운송(10.4%), 기타상품·서비스(10.9%), 식료품·비주류음료(5.1%), 음식·숙박(5.0%) 등은 증가한 반면 보건(-3.3%), 교육(-2.4%), 주거·수도·광열(-0.4%) 등은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구입과 운송기구 유지·수리 등 교통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고 외식과 숙박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입원서비스 등 의료 지출과 정규교육 및 사교육 지출은 감소해 필수 지출 항목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뉴스

였다.

비소비지출 증가도 두드러졌다. 경상조세와 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등이 늘면서 전체 비소비지출이 6% 이상 확대됐다. 이는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 가능한 자금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반해, 연간 기준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0.4%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연간 지출이 줄어든 것은 물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도 실질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중·고등학교 생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또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가사도우미나

아이돌봄 인력 사용이 감소하면서 가사 서비스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비지출 비중은 음식·숙박(15.8%), 식료품·비주류음료(15.3%), 주거·수도·광열(12.3%), 교통·운송(11.5%) 순이었다.

4분기에는 전년도 3분기였던 추석이 10월로 이동하면서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해 근로소득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기 기준으로는 가계 여건이 일부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서지현 과장은 “근로·사업·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해 총소득 상승을 이끌었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 본격 착수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코미르)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했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미르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동향 ▲재자원화 실적 및 추진계획 ▲신설 국고보조사업 안내 등이 소개됐다.

정부가 제시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타넘)다. 이들 광물은 이차전지·전기차·반도체·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한다.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핵심자원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재투입하는 활동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주도 산업단지 AX 본격 시동

산업부, 창원서 M.AX 11번째 분과’ 출범
산단별 ‘대표선도공장’·테스트베드 구축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AI)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기존 10개 M.AX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연계 ▲산단별 우수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에는 10개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 위원장들이 참여한다. MINI 얼라이언스는 산업단지 AX의 실행조직으로, 이날 창원 MINI 얼라이언스가 첫 출범했다. 향후 반월·시화, 명지·녹산, 울산 미포, 전북 군산, 전남 여수·대불, 충남 천안, 강원 후평 등으로 순차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AX 실증산단’ 10개 소(반월·시화·창원·명지·녹산·울산·천안·

군산·광주첨단·여수·대불·강원후평)를 지정해 산단별 앵커기업 대상 ‘AX 대표선도공장’ 구축과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에 나선다. 실증 성과를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전국 산단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단지 AX 추진전략’도 발표하고, 전국 1341개 산업단지를 제조 AX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M.AX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분야 앵커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크팩토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AI·로봇 기업, 대학, 연구소가 결집한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 메가특구와 결합한 혁신공간 조성도 병행한다. 올해는 AX 실증산단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핵심공정·제조 난제·제조지식(암묵지) 분야 AI 모델 수요를 발굴해 공동 개발·확산하고,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 매칭을 위한 ‘M.AX 카라반’ 현장 상담회와 세미나를 정례화한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현장수요 기반 R&D 및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쿠팡 ‘납품갑질’ 과징금 21.85억

목표 마진 달성위해 단가 인하 압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부담시킨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PPM(Pure Product Margin, 순수상품판매 이익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GM(Gross Margin, 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해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면 광고비, 쿠팡채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

도록 요구했다. 이 역시 발주 중단·축소가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상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2809억3487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또 법정기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 8억53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채험단 프로그램에 따른 미소진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채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중 2970개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에서 고객채험단이 실제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5억3679만원 상당)가 발생했지만, 이를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소멸위기 10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식품부, 지역상권 회복 마중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26일 개시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거주민은 이달 26~27일 양일에 걸쳐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장수를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지급 일정은 26일 전북 장수군, 순창군, 경북 영양군, 27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남 남해군이다. 전남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 포함, 두 달 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장수군은 첫 지급을 기념해 군내 상점들이 판매부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장수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형 수산자원관리 AI 플랫폼’ 구축 추진

해수부,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가 ‘한국형 수산자원관리 인공지능(AI)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의 AI 모델인 단일어종·단일해역에서 더 나아가, 해양·기후·수산자원 등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다어종을 비롯해 복합해역 및 장기 어장환경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등 AI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인 자원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합전략 수립 ▲책임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기후·수산자원·해양환경 변동 등 수산자원 데이터를 통합 및 표준화하고, 수산자원의 조사부터 분석, 평가까지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급감 및 이동위험종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근해 어항 변동을 실시간으로 예측·검증하는 모의 실험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